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2013년 6월 4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2013년 6월 8일 ~ 2013년 6월 21일

주요 키워드

- 1.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 처리** :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처리했다.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 2. 14차 건강심 결과 DRG 확대 및 토요일무가산제 시행** :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 건강보험료율을 5.99%로 최종 결정했다. 또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DRG) 확대와 토요일무가산제를 포함하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이라는 주제 하에 '만성질환관리제'도 논의했다.
- 3. 심평원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 정부는 그동안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오는 7월부터 심평원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4. 치과 피부레이저수술 항소심서 무죄 판결** : 치료 목적이 아닌 치과의 피부레이저 수술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3일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는 미용목적의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했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발돼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이번 판결은 미용 목적의 치과 보톡스·필러 시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5. 기타** : 복지부 9일 인턴제 폐지 본과 학생 대상 전수조사 착수, 거동불편 환자 등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전공의 정원 인턴제 폐지까지 3200명 수준 감축,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결과 다음달 12일 발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삭제 국회 복지위 통과, 보건소 진료기능 그대로,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일본 일반약 인터넷판매 전면 허용

1. 보건의료정책

○ 복지부, 9일 인턴제 폐지 본과 학생 대상 전수조사 착수 (6. 10)

의과 대학생에게 인턴제 폐지 시행시기(2015-2018년)를 묻는 전수조사가 지난 9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인턴제 폐지)' 개정안을 이번 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인턴제 폐지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인턴제 폐지는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시행 시기 결정만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의대협은 시행에 앞서 보완책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선보완 후시행'을 주장하며, 2015년 폐지는 무리라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를 총괄하는 학장협도 2015년 폐지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턴제가 폐지되면 전체 전문의 수련기간을 총 4년으로 하는 NR제도가 도입된다.

○ 심재철 의원, 거동불편 환자 등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6. 10)

심재철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 의료인이 원격의료가 가능한 장비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 원격의료를 하는 의사가 제공하는 전자처방전과 원격의료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서비스를 의료인간에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해 허용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및 원격의료서비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에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산업의 발달을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확대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무분별한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 전공의 정원, 인턴제 폐지까지 3200명 수준 감축 (6. 11)

전공의 정원이 4년간 또는 인턴제 폐지 시점까지 3200명 수준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1일 2013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고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 개정안과 수련 병원 지정신청에 따른 265개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복지부는 병협 측에 전공의 정원 감축 기본 방향에 대해 의대 배출인원인 3200명 수준으로 4년간 유지하거나, 인턴제 폐지 시점까지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공의 정원감축 목표기간까지 수련병원 지정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10% 감원, 그 외 과목은 20% 감원, 동결과목, 정원 사후 인정과목 등으로 구분해 조정할 예정이다. 2014년도 정원 책정 시부터 적용되는 지도전문의 자격 변경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도전문의를 2012년 9월 이전에 지도전문의로 종사중인 자로 명확히 하고 종전의 방침에 의해 지도전문의로 인정하기로 했다. 2014년도 수련병원 지정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양지병원 등 7개 병원에 대해 신규 지정 신청을 인정해 229개 병원, 36개 기관 등 총 265곳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신설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준해 신규 신청한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지정 신청 인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 심평원,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6. 13)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위탁자는 14개 보험회사 및 6개 공제조합이며 위탁자는 심평원으로, 오는 14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 현황은 지난 2005년에는 3986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2년에는 1만929건에 달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면서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부, 홍준표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 요청 (6. 13)

보건복지부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경남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경남도에 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 장관이 시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제172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남도가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 명령을 위반했으며,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이러한 법령 위반 행위를 확정시킨 것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돼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등은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상남도로 귀속하도록 한 조항은 법령에 위반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보고서 발간 (6.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결과, 자격변동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8586원, 급여비는 14만9896원으로 평균 급여혜택은 납부 보험료의 1.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계층(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17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135원의 급여를 받아 5.1배의 혜택을 받았으며, 상위계층(20%)은 세대당 월평균 20만602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2만2086원의 급여를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부담 차이는 9.5배, 급여혜택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해서 보면, 지역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1661원, 급여비는 12만6148원으로 1.5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9만6323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9만1338원)이며, 전남은 5만232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2만566원을 부담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서울(10만4988원)이며, 제주는 7만3962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결과 다음달 12일 발표 (6. 17)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다음달 12일 채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지난 12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특위는 오는 24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어 7월 3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9일에는 경상남도의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다음달 4~5일에는 특위 위원들이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3개의 지방의료원을 찾아 현장검증을 할 계획이다. 이후 12일에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특위는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태, 경영상황 등 운영 실태 전반과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산부인과학회, 복강경 수술 중단 철회 ... DRG 시행 후 보완하기로 (6. 17)

대한산부인과학회가 7월 1일부터 복강경 수술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고 포괄수가제를 1년간 선 시행한 후 제도를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병기 산부인과학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번도 제대로 시행해 보지 않은 제도를 유독 산부인과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 문제점이 나타날 때마다 산부인과 환자들에게만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정책의 결정권은 저희에게 있지 않다. 정부는 예정된 제도의 문제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행을 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이를 위해 1년간의 시행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학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1년 후의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면, 2~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2년전 포괄수가제 도입 시부터 정부에 ▲적절한 질병과 수술의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신의의료기술의 연구와 도입을 보장하는 예외조항을 인정하며 ▲중증 환자의 진료를 꺼리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삭제 국회 복지위 통과 (6. 17)

처방 증대를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보험 급여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76개의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 복지부, 보건소 진료기능 그대로 (6. 18)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안 발의와 함께 개원가의 관심이 쏠렸던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입법예고된 뒤 국회에 상정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 방향은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질병예방과 보건 사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도시보건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 축소 방침을 시사해 왔다. 개원가와 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지적과 진료중심 운영에 대한 비판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 대상 제한 및 본인부담 인상 등을 추진하려 했던 것.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 진료 이용계층 분석을 실시하기도 했다. 복지부 분석결과, 보건소 진료 이용자의 6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고 나머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병에 있어서도 감기 등 단순 경증질환이 아닌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 통증질환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 결과는 굳이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 인상 계획도 현재로서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보건법 하위법령에서는 오히려 보건소 업무를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년 초까지 마련해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 중 보건소의 기능에서 기존에 명시돼 있던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등이 사라짐에 따라 진료기능 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 14차 건정심 의료계 의견 대폭 반영, 내년 건강보험료율 5.99%... DRG 확대 및 토요일무가산제 시행 (6. 18)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 건강보험료율을 5.99%로 최종 결정했다. 또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DRG) 확대와 토요일무가산제를 포함하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도 심의·의결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에 따라 현재 5.89%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부터 5.99%(5.89*1.017)가 적용돼,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2.995%(현재 2.945%)를 부담하게 된다.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DRG 종합병원 이상 확대 시행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부터 다른 질병군(백내장·편도·맹장(충수절제)·탈장·항문·제왕절개 등)과 함께 시행된다. 단, 건정심은 가임 능력을 보존하는 시술에 대해 일정부분 수가를 가산하기로 의결했다. 가산 대상은 자궁·자궁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난소를 보존하는 자궁근종절제술,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 성형 수술 등이며,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대해서만 30% 가산된다.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학회가 주장해 온 자궁·자궁부속기 분류체계도 DRG 확대 시행 전에 세분화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11개 환자분류는 자궁·자궁부속기가 분리돼 16개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사활을 걸었던 토요일무가산제도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건정심은 약국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 진료시 오전 9시부터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을 적용,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9~10월 시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시행령 개정 후 토요일 오전 9~13시 30% 가산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1000원 정도 오르게 된다. 현재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9시 또는 공휴일에만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1년간 인상하지 않고, 대신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로 했으며, 시행 1년 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이라는 주제 하에 '만성질환관리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혜택을 보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의료계가 제시하는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급성심장정지자 생존율 3.3% → 4.4% (6. 19)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퇴원율이 2010년 3.3%에서 2012년 4.4%로 증가했다. 급성심장정지란 심장의 정상 순환이 중지된 상태이며, 생존퇴원율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생존해 퇴원한 비율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11-2012 급성심장정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선진국

수준(미국 9.6%)에 미치지 못하는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19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 내원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2만7823명(2012년)을 대상으로 구급대원들이 직접 작성한 구급일지를 조사·분석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급성심장정지 발생건수는 2010년 44.8명, 2011년 43.5명, 2012년 45.6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단, 이 결과는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만을 포함한다. 지역별 급성심장정지 생존퇴원율은 서울 8.7%, 대전 6.5%, 인천 5.3%, 경기 4.8%인 반면, 경북 1.4%, 전남 1.6%에 그쳐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6. 2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기존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해 약 2만3000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했다.

2. 보건의료산업/기술

○ 민주당·보건의료노조, 전 진주의료원장 등 2명 검찰 고발 (6. 10)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부실운영과 부정비리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가 검찰에 처음으로 고발됐다.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당 경남도당은 10일 진주의료원 전 원장 김모씨와 전 관리과장 윤모씨를 각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와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남도가 실시한 '진주의료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등은 "김 전 원장은 2007~2009년 접대경비를 사용하면서 관련 법·규정을 위반해 1647만원을 목적 외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은 물론, 의사직원 간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소속 의사 6명은 2009년도 기본연봉이 전년 대비 36.36% 인상된 반면, 노조원은 2008년 이후 5년간 임금이 동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진주의료원 관리과장으로 일했던 윤모씨는 2009년 특수의료장비 활성화 실적수당을 지급하면서 허위 규정을 삽입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했으며, 이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만 총 1억2227만원에 이른다. 또 ▲응급실 당직근무 의사 명단 허위작성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특혜성 수의계약 ▲공중보건기사 보수 부당지급 등의 부정행위도 드러났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일 홍준표 도지사,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3명을 직권남용·노조법 위반·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 진주의료원 조합원들, 해고수당 반납하기로 (6. 11)

지난달 29일 폐업 발표로 해고당한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이 해고수당을 반납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해고된 조합원 70명은 지난 10일 회의를 통해 "진주의료원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이룩하자"고 결의를 모으며 해고수당을 반납하겠다고 공문을 사측에 전달했다. 조합원들이 받은 해고수당은 평균임금 3개월 분으로, 조합원들은 이 해고수당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이 통장에 입금된 해고수당을 반납하기로 결의한 것은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해고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진주의료원을 반드시 정상

화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 진주의료원 끝내 해산 ... 경남도의회 조례안 강행 처리 (6. 11)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해산 조례안은 오는 16일까지 경남도에 이송된다. 조례안이 경남도로 넘어오면 도는 안전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행 정부는 조례 전문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통보하며 복지부는 해당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재의 요구가 없으면 경남도는 애초 도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공포되면 조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

○ 식약처,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개발 실무자 교육 (6. 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관련 업체 제품개발 실무자를 대상으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개발 실무자 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기법 ▲안전성 요구사항 ▲국제표준 동향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현장 학습 ▲개발사례 등이다.

○ 제약 이어 의료기기도 '혁신형 기업' 선정 추진 (6. 16)

제약에 이어 의료기기산업에도 '혁신형 기업 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 오세재 의원은 지난달 24일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도 법제화 추진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오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선도·도약형으로 선정되는 의료기기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 및 우선 금융지원 ▲조세감면 ▲연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면제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기업 인증제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산업육성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 설립 등이다.

○ 의료기기 수출, 신흥국서 강세 (6. 17)

국내 의료기기 수출이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국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진국에 대한 수출액 비중은 감소 추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수출입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출액은 6억5500만 달러로, 2008년 이후 연평균 18.9%의 성장률을 보이며 선진국(12.9%)보다 6% 정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더불어 무역수지에서도 신흥국은 흑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선진국은 적자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릭스의 수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21.3%였으며, 선진국과 브릭스 외 신흥국에 비해 크게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 병원내 약사정원 미달수준 심각 (6. 17)

약사 정원이 미달된 병원이 많아,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병원 내 무자격 약사 조제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의료기관이 약사 정원을 충족하고 있지 못했고, 무면허자 조제 행위가 의심된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국 병원급 이상 29개 의료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의료기관에서 22건의 현행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사례는 약사(한약사) 정원 미충족이 16건, 병원 내 약사 면허자가 없는 경우 등 무면허자 조제행위 의심이 4건, 자료제공 및 확인서 날인 거부 2건이었다. 현장조사 전에 실시한 현황자료 분석조사에서도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 의료기관에서 약사 정원이 미달됐다. 또 275개 종합병원 중 79개, 1375개

병원 중 427개 의료기관이 정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약사 정원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약사 면허 미소지자가 조계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기관 및 무면허자가 고발 조치된다.

○ 치과 피부레이저수술 항소심서 무죄 판결 (6. 19)

치료 목적이 아닌 치과의 피부레이저 수술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치과에서 행하는 미용 목적의 치과 보톡스·필러 시술의 인정 여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3일 이성현 원장(뉴욕M치과)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원장은 치과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했었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발돼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구강악안면외과는 구강 및 턱뿐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교과서에는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지방흡입술, 자가지방이식술, 모발이식술, 레이저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했다. 또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며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양악수술의 경우 성형외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에 의해서도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레이저시술들은 안전성이 상당히 검증되어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며 “따라서 이번 사건의 시술들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라 할 것이고, 원심은 법리를 오인하여 유죄로 잘못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용 목적의 치과 보톡스·필러 시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치과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정부, 제약산업 지식재산 관리 운영 및 기술 이전 거래시장 활성화 등 방안 마련 (6. 20)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이전 인프라 선진화에 나선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과 기술사업의 활용 및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술지원 인프라의 선진화를 위해 ▲지식재산 관리운영 사업 ▲기술 이전 거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제약업계

○ 미국, 사후피임약 전연령에서 비처방 구입 허용 (6. 12)

미국이 사후피임약(Plan B morning-after pill)에 대한 사용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 언론들은 11일, 미국 정부는 사후피임약의 처방 판매를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그동안 15세 이상 여성들만이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었던 규정을 폐지하고 전 연령대에서 구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월, 미국 지방법원 판사 에드워드 코만은 사후피임약이 연령 제한없이 비처방으로 판매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했으나 법무부가 최근 태도를 바꿨으며 FDA 역시 판결을 준수할 계획이다.

○ 일본, 일반약 인터넷판매 전면 허용 (6. 17)

일본 체인드럭스토어협회는 일반의약품 대부분에 대해 인터넷 판매를 해금하기도 결정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위장약, 해열진통제 등 1만여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원칙적으로 해금하기로 조치를 내린 데 대한 반응이다. 일본 아베 총리는 최근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의 인터

넷 판매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후생노동성이 일반의약품의 무분별한 인터넷판매를 규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인 것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지난 1월,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라쿠텐이 낸 소송에 대해 일반의약품의 인터넷판매 제약을 없애라고 판결한 바 있다.

○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제약산업 투명성 제고 및 윤리적 발전 방안 논의의 장 마련 (6. 21)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20~21일 진행한 '2013 KRPIA 윤리경영위원회 워크숍'에서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산·정 협의체를 '한시적'이 아닌 '상설' 운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KRPIA 권오훈 전무는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고민하는 사안들을 협의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한국제약협회 장우순 부장은 "연구·교육·학술 진흥을 위한 관련 업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처럼 상시적으로 심의하는 기구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의료계 등 관련 당사자와 사회간의 신뢰 관계 구축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대한의학회 이형중 학술위원회 간사는 "유관단체들의 논의를 통해 제도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한편 공생하는 풍조 조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박지혜 사무관은 "협의체의 구체적인 방향과 기간 등은 협의체 운영을 하며 보다 분명한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불법 리베이트 규제 동향 및 의료인과 제약산업이 투명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고윤석 KRPIA 규약심의위원장은 "의·산·정 협의체는 관련 법률의 불명확성, 미비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관련 당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당한 리베이트의 정의와 범주를 합의하는데 그 설립 근거가 있다" 며 "나아가 부당한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심하고 그 해결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 의업단체

○ 의약 5단체, 진주의료원 폐업 맹렬히 비난 (6. 12)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해 촉발된 진주의료원 해산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5단체가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 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11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을 기어이 가결 처리한 것은 원칙과 진실을 사라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방의료원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이유를 적자경영으로 내세웠지만,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제도적인 문제(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에 있는 것"이라며 5년전 경남도가 허허벌판으로 의료원을 확장 이전한 것이 적자를 확대한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는 근본적인 원인과 자신의 책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고 노조에만 그 책임을 돌려왔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성명은 또 "진주의료원의 문제는 일개 지방의료원이 안고 있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일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의료기관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강행처리된) 경남도 의회의 결정은 의료제도 및 환경, 그리고 공공의료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번 해산 조례안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학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함께 했다.

○ 치협, 치과의사 인력 조절 나선다 (6. 20)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한 TF 구성과 회원보수교육규정 및 지침 개정 등의 안건을 다뤘다. 인력수급 TF 위원장은 홍순호 치무담당 부회장이 맡고 치대학장협의회와 공직치과의사회 추천 인사, 집행부 임원 등 19명의 위원을 구성키로 했다. 이사회는 또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종합학술대회의 점수부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비합법적인 보수교육 시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등 회원보수교육규정 및 지침을 개정했다. 종합 학술대회 보수교육 최소인정기준은 ▲연제 4개 이상 ▲연자 4명 이상 ▲총 강의 6시간 이상 ▲구연 또는 포스터 시상이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5. 질병/기타

○ 열사병 14건 등 온열질환자 급증 (6. 10)

열사병 14건, 열실신 11건, 열탈진 8건 등 더워진 날씨에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0일 하절기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운영 중인 '폭염건강피해 감시체계' 분석 결과, 6월 첫 주(2~8일) 총 3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15명)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6월 첫 주 확인된 온열질환자 37명 중 남자가 27명(73%)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 40대가 각각 14명, 11명으로 많았다. 또 온열질환은 12~16시 사이 주로 실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서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자 또 사망 (6. 16)

일명 살인진드기라 불리는 야생 작은소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또 사망했다. 강원도에서 SFTS 확진을 받고 치료중이던 82대 남성이 15일 자정쯤 사망했다. 이 환자는 지난달 말 텃밭에서 일하던 중 벌레 등으로부터 옆구리를 물린 후 SFTS 유사 증상을 보여 강릉지역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로써 SFTS 감염으로 확인된 환자의 사망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와 강원 각각 2건, 경북 1건 등이다. 한편, 15일 현재 SFTS 의심환자는 모두 117건이 신고됐고 이 중 확진 환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